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붙임자료 [1~4]

2022. 2.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생략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분리발주 예외범위



산업통상자원부

수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경유)

제목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 범위 재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 법령제도-634호(2018.8.17) 관련입니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에 관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명사무관

김종현

과장

가람 0/25
최우석

별첨자

시행 전력산업과-956 (2019.02.28.) 접수 법령제도-192 (2019.03.04.)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 / http://www.motie.go.kr
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243 전송 044-203-4764 / spademar@motie.go.kr / 비공개(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

연번	분리발주 예외 사유
①	전력신기술 제도폐지('16.1.6) 전에 전력신기술로 지정되고, 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본 유권해석 공문 시행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②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제외)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서,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되어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전기공사
④	발전소(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의 주설비 공사
⑤	임시가설 공사
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공사
⑦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

■ 답 변 일 : 2019-08-21 17:48:59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상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력신기술 제도폐지('16.1.6) 전에 전력신기술로 지정되고, 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본 유권해석 공문 시행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제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서,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되어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전기공사 ▼발전소(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의 주설비 공사 ▼임시가설공사 등이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대형·특정공사'라 할지라도,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공사가 아니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서 규정하는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나 기본설계서 등을 제공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발주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

유사공사 분리발주 사례

공고명	발주기관	참가자격	추정가격(원)	공고일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 증축공사(소방)	세종특별자치시	소방	52,610,000	21/10/07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 증축공사(전기)		전기	20,240,000	21/10/07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 조성 소방공사	서울특별시	소방	44,149,091	21/09/01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 조성 전기공사		전기	112,184,546	21/08/31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정보통신공사	대전광역시	통신	162,220,000	20/11/26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소방공사		소방	564,400,000	20/11/25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전기공사		전기	483,100,000	20/11/25
수장고 신축공사(소방)	전라남도 여수시	소방	94,382,727	20/09/18
수장고 신축공사(전기)		전기	62,220,000	20/09/18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 증축공사	강원도 홍천군	소방	35,546,364	20/01/29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 증축공사		통신	20,360,909	20/01/29
국립태권도박물관 수장고 조성 공사	태권도진흥재단	전기	22,697,273	19/12/12
국립태권도박물관 수장고 조성공사		소방	80,752,727	19/12/12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수장고 설치공사(소방)	전라남도 나주시	소방	46,286,364	19/09/19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수장고 설치공사(전기)		전기	21,300,000	19/09/19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소방공사	서울특별시	소방	51,465,455	19/06/18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전기공사	서울역사박물관	전기	84,652,727	19/06/18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 사업	대전지방조달청	소방	563,960,000	18/11/12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 사업 공사		전기	922,982,728	18/11/07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사업 공사		통신	529,822,728	18/11/07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 소방공사 수의계약 건적 제출 안내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방	58,552,727	18/09/05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건적 제출 안내 공고		전기	48,735,455	18/08/27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서울지방조달청	소방	2,185,206,000	18/06/14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전기공사		전기	2,441,980,000	18/06/14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통신공사		통신	736,710,000	18/06/14

전기신문

2019. 1. 11.(금)

분리발주 위반한 발주처에 ‘벌금형’

(전기공사)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공사 통합발주 서울투자운용에 선고

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수호 판례 마련 의미
무분별한 통합발주 ‘저동’ 기대

무분별한 전기공사 통합발주를 막기 위한 법적 사태가 마련됐다. 전기공사협회가 분리발주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한 결과 첫 번째 성과를 냈다.

8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협회가 고소한 서울투자운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최근 선고받았다.

서울투자운용은 지난 2017년 강일2지구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통합발주해 공고한 바 있다. 총 145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공사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공사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턴키로 입찰을 실시해 업계의 반축을 샀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년여의 긴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서울투자운용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설계 단계서부터 분리발주를 하지 않



전기공사협회는 최근 발주처의 무분별한 통합발주에 대응해 고소장 제출과 대규모 규탄시위 개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63년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탓에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공사에서도 무분별한 턴키와 기술제한입찰이 횡행했다는 게 협

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대한 협회의 첫 번째 법정 대응으로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 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분리발주를 위반해 온 기관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수호를 위한 관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분리발주 위반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 수호라는 업계의 가장 큰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고난이도 요구 기술제안입찰도 전기공사 분리발주 '문제 없다'

SH·기계전기전자시험연, 아파트·시험센터 분리발주
시공품질 확보와 제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
고여겨졌던 기술제안입찰도 사실상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 전문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기술
제안입찰 공사에 대해 전기·통신 분
야를 분리발주했거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

SH는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
지 아파트 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기본설계하면서 전기·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는
에너지를 자체생산하는 패시브 하우
스 시범단지로 지상 18층, 총 844가
구의 규모다. 패시브 하우스이건 하
나 전기시공분야는 기존 아파트 공
사와 차이가 없어 분리발주하고 있
으며, 건축과 겹치는 외벽태양광 장
치 설치의 분리발주에서 제외시켜
발주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충북 오창에 시험센터를 건설하기위
해 기술제안입찰을 통한 통합발주로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했다가 재공
고를 통해 분리발주기로 결정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 의료
기기 GLP시험센터인 '오창 GLP시
험센터 구축공사' 발주 시, 고난이도
의 시공기술이 요구돼 당초 분리발
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분리발주 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달아 기본계획 기술제안입찰 공
사에서 전문시공분야가 분리발주되
면서, 과거 그릇된 입찰에 대한 문제
점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기시공업계 관계자는 "기술제
안입찰은 전문시공업체의 입찰제한
등 불공정한 관행은 물론 저가수주
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지속적인 민
원 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
으나, 아직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며 "전기공사분리발주는 전기공사
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
선의 원칙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에
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시
공의 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고 해석해, 설계서가 제공되지 않아
분리발주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도 있지만, 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
계서와 기본설계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의견은 국가계약법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
된 우정사업조사센터 공사에서도 전
문시공부분이 분리발주된 바 있어,
기술제안입찰에서 분리발주가 문제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명준 기자 mjkim@

지자체 발주공사 '분리발주' 대세 서울·인천 등 도입 잇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청라 연장선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정
'경쟁 유발' 턴키 대신 '전문성 제고' 분리발주 취지 공감 의미
전기공사협회 노력과 발주기관의 문제점 인지 등과 맞물려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발주를 시대적 흐름으로 인지하는 모양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 분리발주와 관련한 유의미한 결정이 등장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 서울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지난해 6월 입찰방법 심의 결과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서울시를 향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하며 업계정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조달청을 향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종에 대해 설계하면서 전기와 통신 분야는 분리발주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공사 전체 통합발주 또는 토목에 대해서만 기술제안발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 같은 서울시와 조달청 사이의 입찰차의 결론은 서울시 자체 발주로 이어졌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실시설계적자가 모든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기공사는 내년 3월에 분리발주로 진행키로 했다.

이는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 발주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시공이 목적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 일부를 분리발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의 첫 모범사례로 다른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전언이다.

인천에서도 분리발주 소식이 들려왔다. 총사업비 1조2977억원으로 진행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하는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공사다. 이 공사는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km 구간 6개 역을 건설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인천시를 향해 지난해 7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하지만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4 공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협회의 건의

를 수용해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1·2 공구는 하부터널 공사 등 고난도 공사로 턴키 방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기공사협회는 허종식 인천시 정부부시장을 면담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1·2공구 공사에 대해 일괄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지난 5일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2공구를 턴키에서 분리발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한기용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부장은 "설계·시공 분리 입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공정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체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 원래 목표인 20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전기공사협회의 꾸준한 분리발주 건의 관철 및 발주기관에서 턴키 입찰 시 유찰, 참여업체 간 과도한 경쟁, 눈치 보기, 참여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분리발주로 전환함으로써 인지적 가치를 올렸다는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박정배 기자 pb@

- 제39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 국민권익위 질의내용 및 보도자료

1 국정감사 개요

- 일 시 : 2021.10.20(수) 10:00
- 주 체 : 국회 정무위원회
- 대 상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질의의원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2 주요 질의내용

- 지방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꼼수들을 부리고 있으며, 그 중,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을 묶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는 꼼수 계약을 하고 있음
- 또한, 분리발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를 통합발주 하고 있음. ①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 ②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③대구·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등은 일반적인 신축 건축물의 공사이지만,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주 업무로 삼아 집중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답변요약(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지적사항과 같이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음

[호수면 : 제3919호 1면]

021년 10월 29일(금)

일부 지자체, “협상 통한 계약·통합발주, 분리발주 원칙 훼손” 지적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 질타
명백한 위법에도 공공연히 발주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강조
권익위, “점검 적극 추진” 밝혀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저해해온 발주처의 잘못된 발주 관행이 이번에는 고쳐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뤄져온 분리발주 원칙 훼손도 함께 바로잡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일 이뤄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지자체들이 행해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발주 행태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데도 적절히 지켜지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발주 행태다. 발주자가 고난이도의 공사를 발주할 때 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현재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는 해당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용역·물품 계약만 대상이 된다. 지난 2016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해온 결과다. 입찰 심사 과정에서 기술점수를 평가하는데 정량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 선정의 빌미가 되어왔다. 사실상 얼굴만 가린 수의계약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결국 정부는 법령을 개정했고 2016년 9월 이후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계약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러 지자체들이 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곤 했는데 홍성국 의원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자체들이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물품과 공사 계약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꼼수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올 8월까지 12개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기공사만 13건이다. 통신·소방을 포함한 전체 공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들이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에게 “분리발주는 굉장히 중요한데, 별의별 꼼수를 동원해서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등을 예로 들었다. 국가 안보 시설 등 특수 건축물이 아니라면 분리발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가 중심을 잡고 지자체의 잘못된 발주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권익위가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공공기관 부패 관행 개선이 올해 초 권익위의 업무 목표였던 만큼 추진 현황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중에서도 분리발주와 공사계약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별도로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나지운 기자 abc@electimes.com